

종합

민주 복구청장 후보 이형석·송광운씨 광산구청장 후보엔 유재신·민형배씨

광주 5개 구청장 예비후보 결정 ... 본격 경선전 돌입

민주당 복구청장·광산구청장 최종 경선 후보자가 결정됐다. 이로써 광주지역 5개 구청장 최종 경선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으며, 3일 동구청장 경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가 최종 경선 후보자 결정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해 '1차 컷오프' 후 폭풍도 예상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일 공직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를 열고 4명의 복구청장 경선 후보 중 송광운 복구청장, 이형석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등 2명을 최종 경선 후보자로 결정했다.

또한, 5명의 후보가 탄압한 광주 광산구청장 경선후보에는 유재신 전 광주시의원과 민형배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을 최종 경선후보로 결정했다.

시당 관계자는 "어른조사와 면접 점수, 당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광산구청장은 11일, 복구청장은 18일 각각 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구청장 경선 후보로는 김선옥·전주연 예비후보로 결정됐으며, 동구청장 경선 후보는 유태명·조영복 후보로 최종 결정됐었다.

시민매심원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남구청장 최종 경선 후보는 김영집·김화진·정재훈·최영호 등 4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은 시민공천매심원제 적용 지역인 남구를 제외하고 당원 선

■민주당 광주 5개 구청장 최종 경선 후보

자치구	최종 경선 후보
동구	유태명, 조영복
서구	김선옥, 전주연
남구 (시민매심원제적용)	김영집, 김화진, 정재훈, 최영호
북구	송광운, 이형석
광산구	민형배, 유재신

거인단 직접투표 결과 50%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 광주 복구청장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남평오 예비후보는 2일 "지역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 공심위원회 예비경선과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예비경선이 불공정했다고 판단한 만큼 중앙당이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남 후보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당의 해산을 도모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사, 동북 계통 자연유식식 도수터널 건설 공사 등 10여 건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파트 사업의 경우 광주시 남구 봉선동 남양후트 2차 315 가구와 LH(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수암, 백운2, 양동, 지산, 학동2 등 5개 지구 6개 현장 4천683 가구를 짓고 있다. 하청업체만도 광주 33개, 전남 10개 업체를 포함 전체 90개 업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동도급사와 하도급 업체, 입주 예정자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파트사업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관리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대금을 때이는 극단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봉선동 남양후트의 경우 분양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으면 분양대금 환급이나 제3 건설사 선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300억 어음결제 힘들어 ... 90여 하청업체 피해 우려

광주·전남지역 대표 건설사인 남양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은 국내 도급순위 35위, 광주·전남 2위 업체다.

2일 광주지법은 "남양건설이 이날 오후 5시30분에 민사 10부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신청은 충남 천안 두정동 아파트 사업으로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5일 돌

아오는 300억 원 가량의 어음결제에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부터 추진됐던 두정동 아파트 사업은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매월 수십억원의 이자가 발생, 남양건설의 유동성을 악화시켜 왔다.

법원은 조만간 채무자인 남양건설에 대한 심문과 현장점검을 거친 뒤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통상 1~3개월 이

내에 법정관리 합당성 여부를 심의하며, 각각할 경우 해당 기업은 파산 절차를 밟거나 항고, 재항고할 수 있다.

건축, 토목,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남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9천244억원, 매출액 8천463억 원 규모의 중견 건설업체다.

광주·전남에서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와 국가산단 진입로 공사, 연륙교 가설공사, 복합소평릉 신축공사, 빛고을시민문화관건립

■광역 단체장, 시·도의회의장, 시·도교육감 재산 변동 내역 (단위:천원)

성명	2010년 재산총액	2009년 비교증감액	증감사유
박경태 광주시장	2,119,056	-395,141	공시지가 하락, 주택담보대출 증가
박준영 전남도지사	1,445,938	+37,734	3녀의 급여 및 성과상여금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908,289	-29,626	공시지가 하락
박인환 전남도의회의장	257,404	-5,184	승용차 매도 및 예금감소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834,331	+77,263	문중재산 증여, 본인·자녀 급여저축

■광주·전남 소유재산 상위 5명 (단위:천원)

성명	재산총액	증가액
양승일 전남도의원	5,600,233	246,959
김철주 전남도의원	4,472,714	490,432
최민승 광주남구의원	3,520,618	256,938
안혜령 광주시의원	3,082,133	258,171
김석인 전남도의원	3,081,206	148,730

■기초자치단체장 재산 변동사항 (단위:천원)

이름 및 소속	2010년 재산총액	증감액
유태명 광주시 동구청장	677,161	+169,716
전주연 광주시 서구청장	1,635,861	+393,859
황일봉 광주시 남구청장	486,658	-22,879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	1,264,386	+61,470
전갑길 광주시 광산구청장	645,863	+75,124
황주홍 강진군수	1,942,102	+92,427
박병중 고흥군수	131,909	+8,298
조형래 곡성군수	150,733	+83,353
이성용 광양시장	234,808	-1,418
서기동 구례군수	755,431	+170,136
정종득 목포시장	2,031,204	-408,786
서삼석 무안군수	429,694	+52,283
정중해 보성군수	836,107	+25,455
노광규 순천시장	1,771,480	+114,759
박우량 신안군수	1,893,542	-426,258
오현설 여수시장	1,981,021	+353,432
정기호 영광군수	190,434	-25,629
김일태 영암군수	1,413,221	+117,693
김종식 완도군수	2,358,103	+183,388
이 청 정성군수	1,248,619	-193,922
이명용 장흥군수	770,598	+138,499
김종식 해남군수	1,231,592	+1,045,002
전원준 화순군수	1,566,463	-1,588,932

고위공직자 43% 재산 감소 광주·전남은 70%가 늘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 속에서도 광주·전남지역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들의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장과 광주시의원 19명, 5개 구청장 등 광주지역 고위공직자 25명 가운데 68%인 17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박경태 광주시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가격이 2억 8천만원 내려 지난해보다 3억9천500만원이 줄어든 21억1천 900만원을 신고했다. 최종만 전 행정부시장은 아파트 매도 등으로 2천958만원이 줄어 7억1천758만원을, 김윤석 전 경제부시장은 채무변제로 인해 4천164만원이 감소한 6억6천 82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광주시의회의 의원은 17명 가운데 76.5%인 13명의 재산이 늘었다.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은 회사채 구입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2천962만원이 늘어난 9억828만원을 신고했다. 치과 의사 출신인 양혜령 의원은 30억8천218만원을 기록했으며, 조광량 의원은 채무만 6천758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송광운 복구청장은 봉급, 이자소득, 펀드 등으로 6천147만원 증가한 12억6천438만원, 유태명 동구청장은 아파트 매도와 급여, 예금이자 등으로 1억6천971만원 증가한 6억7천716만원을 신고했다. 전주연 서구청장은 오피스텔 전세권을 구입하는 등 지난해보다 3억9천385만원이 증가한 16억3천 596만원을,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은 저축 등 7천512만원이 늘어난 6억4천586만원을 기록했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예금감소로 인해 2천287만원이 줄어든 4억8천665만원을 신고해 대조를 보였다.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원 50명, 시장·군수 18명 등 전남지역 고위공직자 69명 중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44명으로 전체의 64%였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4억4천500만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3천 700만원이 늘었다. 김종식 해남군수는 특히 지난해 1억8천600만원이었던 재산이 부동

산 구입 등으로 10억4천500만원이 늘어난 12억3천100만원이 신고해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증가액을 기록했다. 104㎡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예금액도 불어났기 때문이다.

김철주 도의원도 지난해 4억9천만원이 증가했으며 18억1천800만원을 신고한 이상면 정부부지사도 1억2천700만원이 늘어났다.

박인환 도의회의 의원은 2억5천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줄었다. 최고 재력이 양승일 도의원이 56억원을 신고해 작년보다 2억4천600만원이 증가했으며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대상자는 이일형 도의원으로 채무만 4억4천300만원이었다.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중에는 재산공개 대상자 18명 중 11명이 재산이 늘었고 6명은 감소했다.

기초단체장 중 최고 재력가는 김종식 완도군수로 23억5천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5천400만원이 증가했으며, 박병중 고흥군수가 1억3천100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전원준 화순군수는 지난해 31억5천500만원이었던 재산을 15억6천 600만원으로 신고해 무려 15억8천900만원이 줄어들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사재의 상당부분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재산 총액이 1년 새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재산 총액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49억1천353만1천원으로 1년전의 356억9천182만2천원에 비해 307억9천379만2천원(86.2%) 줄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4일 부동산과 예금 등 사재 331억원을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에 출연한 데 따른 것이며, 보유 부동산과 회원권 가격의 하락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시·설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여론수렴이 우선

오는 2014년부터 광주지역 5개 구의회가 사라지게 됐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를 '준(準)자치구'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준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장은 현행처럼 주민 직선으로 뽑되 기초의회는 폐지된다. 대신 구정·군정협의회를 구성, 기초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기초의회는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 견제라는 기초의회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왔는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선심성 사업 추진이나 유람선 해외시찰 등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유명무실한 기초의회에 대한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 지방행정특

위기 기초의회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다. 지방행정체제 개편한다면서 국민적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중앙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 중앙 정치권 탓이 크다.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 선거에까지 정당이 관여하면서 중앙 정치에 예측된 부분이 적지 않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가 특정 정당 일색이어서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나

가면 된다. 여론 수렴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도 생각한 채 기초의회 폐지라는 극한 처방을 내리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수박람회 참가국가 유치 '발등의 불'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각 국가를 대상으로 참가 유치를 나섰다.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자칫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 2008년 세계박람회 공식 승인을 계기로 참가국 유치 활동을 벌여왔으나 현재까지 공식 참가 의사를 밝힌 나라는 43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직위가 목표한 참가 대상국은 2009년 50개국, 2010년 50개국 등 100개 국가에 이르지만, 실제 참가 의사를 밝힌 나라는 지난해 36개국에 머물렀으며, 올들어서도 7개 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조직위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참가 지원 계획을 뒤늦게 수립한데다 각 국가를 상대로 한 홍보 활동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조직위는 박람회 유치 당시 개발도상국 등의 참가 지원

을 위해 미화 3천만 달러 상당의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럼에도 국가별 지원방안은 개척국으로 선정된 이후 1년이 넘어서야 수립하는 등 느린 대처로 일관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제적 신뢰만 잃은 셈이다.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전남과 여수를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다. 그 성공 여부는 두말할 것 없이 국가와 관공객의 숫자에 달려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열리는 중국 상하이 세계박람회가 '대박' 예감을 하는 것도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가하기 때문이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까지 1년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조직위는 참가국과 관공객 유치를 위해 그야말로 '발로 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도 해외공관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활동을 펴야 할 것이다.

한명숙 전총리 징역 5년 구형

추징금 5만달러 ... 9일 선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해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했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형과

함께 4천6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던 검찰은 외화의 경우 추징금 산정 기준이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아닌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의 환율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5만달러를 선고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추징금 5만달러로 결정했다.

검찰은 판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하고, 판 전 사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첫 공판을 시작해 이날까지 13차례의 공판기일을 여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 진행해 왔으며, 이달 9일 판결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이대통령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 강구"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일본 초등학교서 독도 영유권 명기 논란과 관련,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세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정 대표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정

미경 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성숙한 국가로서 이번 사고의 원인과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예단을 갖거나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은 인명 구조와 철저하고 과학적인 진상 규명, 애국적 희생에 대한 국가적 애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상설주간 申浩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96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